

# 지지율 하락尹, '비속어 논란' 정면돌파... 국감 분수령

尹 지지율, 취임 이후 '최저치' 순방성과 여론전, 민생에 집중 국감 野 '외교참사' 격돌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불거진 비속어 논란이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확산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를 불필요한 정쟁이라고 규정하고, 순방 성과 여론전과 더불어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는 4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국감)에서 윤 대통령의 순방 논란에 대해 송곳 검증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와 언론 보도에 더이상 대응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2일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성과를 경제·안보 측면에서 조목조목 짚으며 "윤석열 정부는 외교 일정을 마친 이제 다시 민생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수석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의 만남을 소개하며 한미동맹의 공고화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바이든 대통령과 이미 뉴욕에서 공감한 윤 대통령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정신에 부합하는 양국 관계'를 감안해 해리스 부통령이 다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제74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한미 특수전요원들의 고공강하를 관람한 후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확정한 '창의적 해법'에 대해서도 양국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미 상원에서는 세액공제 3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IRA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동성 공급장치 실행 협의와 관련해서 "안정적인 금융시장을 위한 조치로 양국이 공감을 이루고 있는 사안"이라며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할 때 통화스와프 등 유동성 공급장치를 실행하기 위한 협력을 하기로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의 한국 방어를 위한 굳건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총체적인 대북확장억제 대응 패키지에 대한 논의를 평가했다"며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약속하면서 특히 7차 핵실험과 같은 북한의 심각한 도발 시 한미 공동대응조치를 즉각 이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그러면서 "어느 때보다 외교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우리에게 외교란 도약이나, 도태냐를 결정하는 담장 위를 걸어가는 일로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 국민과 국익을 지켜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순방 성과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전에 나서는 것에 비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 하락세와 윤석열 정부 첫 국감은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로서는 향후 국정 운

영에 있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를 다시 기록하며 뚜렷한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오차범위 95% 신뢰수준 ±3.1%포인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응답자의 24%가 '잘하고 있다'인 반면, 65%가 '잘못하고 있다'로 전주 대비 긍정 평가는 4%포인트 하락하고, 부정 평가는 4%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이번 순방이 국익에 '도움이 됐다'는 33%, '도움 안 됐다'는 54%로 부정 평가가 과반을 넘었다.

3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표본 오차 95% 신뢰수준 ±2.0%포인트)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4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며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3.4%포인트 떨어진 31.2%(매우 잘함 17.4%, 잘하는 편 13.8%)인 반면,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3.8%포인트 상승한 66%(매우 잘못함 59.9%, 잘못하는 편 6.1%)로 집계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아울러 4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순방에 대해 '외교 참사', '굴욕 외교'라고 비판과 함께 전방위로 국감에 임하겠다는 방침이라 여야는 물론 야당과 대통령실의 격돌도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순방에 대한 국감과 더불어 대통령실 이전 및 영빈관 신축 논란을 비롯해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학력 위조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을 밝힌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메트로경제)와의 통화에서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현안에 집중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며 민생과 경제위기 회복에 전력을 기울일 것을 명확히 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 與 “감사원 존중” vs 野 “권한남용, 선 넘어” 여야, 개천절 맞아 민생 강조 속 책임공방

### 감사원, 文 서면조사 통보

문 전 대통령 “대단히 무례” 반발 민주당 강력 비판 등 여야 ‘충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면서 여야가 충돌한 데 이어, 감사원이 지난달 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냉랭해질 전망이다.

감사원은 9월 28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면 조사를 받으라고 전화로 통보했다. 수사·감찰 기관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요구는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처음이다.

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의 서면 조사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대단히 무례하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 측에 서면 조사를 위한 질의서를 이메일로 보냈으나, 문 전 대통령 측은 수령 거부 의사를 감사원 측에 밝히고 비서실과 참모와 상의해 이를 반송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치 보복을 위해 감사원이 전 정부 인사가 수장으로 있는 공공기관에 표적 감사를 한 것에 이어 문 전 대통령에게까지 서면 조사를 통보하자 집단으로 반발하는 분위기다. 민주당 산하 윤석열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노리는 건 결국 문 전 대통령이었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감사의 방법도 특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수부 검찰수사를 방불케 하며 말이 특정 감사이지 문재인 정부 모든 사안에 대한 포괄적 감사"라며 "감사원이 감사원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건영·김영배·고민정·김의겸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오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의 선을 넘는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국민이 아닌 권력을 위해 쓰기로 작정 한듯 싶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수사기관도 아닌 감사원이 대체 무슨 권한으로 이미 공직에서 물러난 전임 대통령을 조사한다는 것인가. 대단히 무례한 행태일 뿐 아니라, 스스로 권력의 하수인이 되겠다는 생각 없이는 불가능한 사고"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천절 경축식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온갖 국가 사정기관이 총성 경쟁하듯 전 정부와 전직 대통령 공격에 나서고 있다. 유신 공포정치가 연상된다"며 야당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자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두고 민주당이 정쟁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눈에는 정녕 북한에 사살당해 불태워진 우리 국민의 죽음과 유족의 피눈물이 보이지 않습니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 대변인은 "감사원은 법상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헌법기관이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감사원의 모든 노력을 존중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해 문 전 대통령 측에 서면 조사 통보를 한 사실과 질문서 전달 과정을 밝히며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지 감사 종료 시점에 수사를 요청하고, 그 내용을 간결하게 국민들에게 알려드릴 예정이며 향후 감사위원회의 등 내부 처리 절차를 거쳐 감사 결과가 확정되면 그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국민의힘 “홍익익간 정신으로 민생” 민주당 “정부여당 혼신의 힘 다해야”

제435주년 개천절을 맞아 국민의힘은 야당을 설득해 민생을 챙기겠다고 다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자성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여야가 힘을 합쳐 홍익인간의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개천절인 3일 오전 논평을 내고 "(백성들) '널리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정신은 민생을 잘 챙겨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해드리라는 뜻일 것"이라며 "국민의 힘과 윤석열 정부는 홍익인간 정신을 되새기며 오직 민생을 기준으로, 국민의 삶을 챙기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은 진정으로 국익과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자문해야 한다. 국민께서는 분명 정쟁을 멈추고, 국민의 삶을 돌보라고 말씀하신다"면서 "경제·외교·안보 등 각종 현안에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기도 부족한 시간이지만, 야당은 여전히 당리당락을 위한 국정 훼방에 여념이 없다"고 비판했다.

양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국정의 무한책임을 가지고 있는 여당으로서, 야당이 민생의 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자신했다.

반면,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우리 민족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였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고난을 이겨냈다"면서도 "안타

깝게도 지금 대한민국도 순탄한 길을 가고 있지 못하다"고 운을 띄웠다.

안 대변인은 "위기 극복을 이끌어갈 정부는 경제와 민생 위기는 뒷전인 채 욕설로 얼룩진 외교 참사를 감추는 데만 매달려 있다"며 "국민은 경제 위기로 하루하루가 걱정스러운데, 대통령은 매일매일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취임 5개월도 안돼 24%로 떨어진 국정지지도는 싸늘한 국민의 평가"라고 설명했다.

그는 "더 늦기 전에 위기 극복에 앞장서며 국민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털어드려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홍익인간'의 정신을 되새겨 국민을 이롭게 하는 국정 운영에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희서 정의당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오늘 홍익인간 정신을 가장 절실하게 되새겨야 할 곳은 이 나라 정치권"이라며 "국민의 바람과는 동떨어진 정권 탓, 전 정권 탓, 언론 탓, 국민 탓, 남 탓 싸움 속에 국민과 민생은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자당 권력자의 심기와 눈치만 쳐다보느라 더 날 선 말로 정쟁에 몰두하는 정치인들 속에 국민과 민생은 없다. 노란봉투법, 쌀값안정, 물가와 부채대책, 사회적양극화 해소와 한반도 평화 체제까지 산적한 평화, 민주, 민생 정치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면서 "여당과 거대 야당 모두 다시 한 번 홍익인간 정신을 되새기며 국민을 위한 정치, 민생 정치의 현장으로 돌아오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태홍 기자